

“미래위한 투자” F1 “민생파탄 주범” 복태지 예산 贊反 계륵 예산

전남도의 '2011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전남도의회가 시끄�다.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 '극과 극'의 주장을 내놓는 주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등 허술한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F1 대회 추경안, “복태지”VS “계륵”공방 = 15일 오후 전남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열린 50여명의 주민들이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면 후순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다”, “미래위한 F1 투자, 재정파탄 웬말인가”라는 플래카드와 어깨띠를 두른 채 F1 대회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도청 앞에서는 광주·전남 진보연대 등을 주축으로 한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 F1중단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이 계속됐고 ‘부실운영, 비리 온산 F1대회 중단해라’는 플래카드가 설치됐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판이한 시각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밀 빠진 뒤에 물룻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들과 “대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전남도 추경예산 편성 옥신각신

광양만권 경제구역 개발 지원기금 조례 보류

뜻 지불한 비용이 낭비된다”는 찬성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공무원간 입장도 달랐다. 김욱기(민주·나주 2) 의원이 “F1은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하자, 주동식 F1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은 “장래 복태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아예 민감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 ‘추경안 심의’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민원성 질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F1 대회가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 공방 = 현대자동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 해지로 받게 되는 위약금 사용 방안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도 논란이 뜨거웠다.

전남도는 현대차와의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677억원의 사용 범위를 광양만권 및 전남 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을

제정,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례가 정한 사업이 기금을 조성해 추진할 정도로 특정한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금 사용 규정도 애매해 F1 대회 등 특정 현안에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조례안이 규정한 ▲산단단지 조성 및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건립 및 육성 사업 지원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장학금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기금 사용 범위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도 논란을 부추겼다.

유현주(민주·비례) 의원은 “기금의 사용용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F1사업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F1대회에까지 전용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측은 지난 1994년 8월 울진제1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대형개발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외환위기와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지난 2005년 12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허술한 예산 편성 = 전남도는 22개 시·군 공중목욕장 67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 6억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50%인 3억3500만원만 올린데 이어 올해 추경안에서도 나머지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 고작 1500만원만 편성에 제출했다. 결국 농어촌 노인들의 운동·목욕·진료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남도 발표는 ‘헛말’이 됐다.

전남도는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난해 본예산에 9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번 추경에 돌연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대상자인 여수가 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 형편상 4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으로, 엑스포에서 민 예산이 밀린 셈이다.



전남도와 민주당 영산강 수해예방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나주 노인면 승촌보 건설 현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에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 두 번째), 유선호(~ 첫 번째)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마전 취약지구 공사 서둘러라”

전남도-민주당 영산강 수해예방 현장 점검

“예산하지 못한 집중호우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에 대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합니다”

14일 영산강 살리기 건설현장을 찾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유선호 의원 등은 장마철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지사와 이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산강 지류인 영산천과 지석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승촌보 건설현장까지 곳곳을 둘러보며 장마에 대비한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박 지사는 특히 ‘준설(浚渫)’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영산천 일대는 준설이 안 돼 물바다를 이뤘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셋강이나 영산천 주변까지 준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승촌보가 시수량 110m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만일의 하나 조만간 탁월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4대강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인 만큼 하루속히 취약지구 보강을 서둘러라”고 촉구했다.

유선호 의원도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사로 영산강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 유실이 염려된다”며

지석천 합류지점 및 영산천 대책을 요구했다.

이성훈 나주시장도 “나주시를 관통하는 영산강 분류가 낙차에 의해 유속이 빨라지고 직강화로 유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취약 지구 장마철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지사와 이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산강 지류인 영산천과 지석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승촌보 건설현장까지 곳곳을 둘러보며 장마에 대비한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박 지사는 특히 ‘준설(浚渫)’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영산천 일대는 준설이 안 돼 물바다를 이뤘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셋강이나 영산천 주변까지 준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승촌보가 시수량 110m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만일의 하나 조만간 탁월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4대강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인 만큼 하루속히 취약지구 보강을 서둘러라”고 촉구했다.

유선호 의원도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공사로 영산강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 유실이 염려된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산강 사업구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수해피해 걱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 활동에는 이호균 도의회 의장과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옥기 도의원 등 민주당 당원 50여명도 참석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단체장 ‘내사람 심기’ 막는다

선거 참모·비서 등 채용 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규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 직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충남도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인선시에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와같이 지자체장이 ‘내 사람

심기’를 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탓에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하는데다 행여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행안부는 또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풀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외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기간을 명확히 한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나 마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조사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9월께 구체적인 인을 만들고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러지 말란 법도 없다

Korea First Developer
ShinYoung

Gxwell
homes

http://yeosu2.g-well.co.kr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전망이 예술이다!

여수 최고층의 탁트인 전망, 여수 최고의 문화예술 공간-예술마루, 여수 엑스포와 응천의 미래가치까지... 앞으로 전망이 더 예술이다

여수의 두번째 감동- **신영응천지웰II**

청약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3순위
6. 20(월)	6. 21(화)	6. 22(수)	6. 23(목)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무이자

4-Bay 설계 3면 개방 구조

84㎡(≒33坪) / 112㎡(≒43坪) 총 614가구

분양문의 **061)683·7000**

신영, 모교혁신빌, 한라건설